

EC의 에너지정책

EC 단일에너지 시장의 목적과 과제

유럽대륙은 현재 심각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구소련에서는 정치, 경제형태가 완전히 바뀌었고 최근 마스트리히트에서 조인된 유럽동맹에 따라 유럽 공동체 통합은 더욱 더 가속화 되고 있다.

'92년말은 EC에게 있어서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단일 시장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일시장의 일부로 단일에너지 시장이 탄생할 것이다.

향후 경쟁이 격화되는 세계상품 시장속에서 EC의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 받을 수 있는 통합된 에너지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EC의 에너지 정책 목표는 '86년 조약 중에 규정되어 있다. 그 가운데 보다 큰 통합, 제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안정된 공급보장, 코스트 인하와 시장경쟁력의 제고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조약의 구체화를 위하여 역대 에너지 시장에 관한 시행문서가 '88년 5월 공포되었다. '88년 이후 이 목표의 달성과 관련한 진전도 있었지만 자유롭고 경쟁적인 에너지 시장을 형성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그 일례로 공동체의 에너지 시장이 역사적인 이유에서 국가별로 분할되어 있어 경제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 또 많은 가맹국은 가격설정과 투자 등에 과도한 간섭을 하고 있다.

동유럽국가의 EC 참여

석유부문에서는 국영기업의 독점이 폐지되고 EC에 의해서 생산과 개발이 허가될 것이다. 또 공공부문의 에너지 조달은 공동체 규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에너지 이용설비도 합리적으로 될 것이다.

공동체에 관해서는 EC의 목적달성을 향한 노력에 대해 제국이 점점 더 전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 적극적인 자세가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의 가맹국도 EC 법률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 회원국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EC 공동체의 향후 방향을 지지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많은 EFTA국가들이 새로운 유럽의 형성에 걸맞은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가맹국이 될 것이다.

단일 시장의 실현이 EC의 목표이지만 공동체의 성장과 환경과의 관련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문제는 공동체를 넘는 차원의 문제이고 유럽대륙 이상의 것이다. 요즘 유럽의 여론은 환경문제를 인플레이나 군비관리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EC의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

최근 EC위원회는 CO₂ 배출량에 관한 제안을 하였

다. EC는 CO₂ 배출량을 2000년에 '90년 수준으로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의 개선 및 에너지 기술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C는 기존의 기술과 지식을 더욱 확대하여 단지 공동체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의 국가들과 협력하고 개발도상국에는 기술 이전도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EC는 독자적인 탄소/에너지세를 도입하려고 한다.

환경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오염자 부담」이라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CO₂라고 한다. CO₂의 배출량이 많은 연료는 탄소세가 무겁게 부과될 것이다. 이 세법에 따라 수요처는 공동체의 도처에서 경제 행동의 변경을 요구받고 있다.

탄소세는 EC 산업에게 있어서 국제경쟁력상 핸디캡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기화로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공급체제를 이룩하여 이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와 환경문제의 관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EC는 타 선진국과 함께 동유럽과 개도국에 기술을 이전하고 에너지 협력과 기술협력의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다.

기술원조의 핵심은 에너지절약과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으로 동유럽, 구소련 및 개발도상국에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원조에 따라 환경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지금까지 에너지를 과소비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CO₂를 대량 배출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91년 12월에 세계 50개국이 조인한 「유럽에너지헌장」은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치적인 구조를 설정하고 약정국 사이의 보완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약속을 수반하는 협정 및 의정서를 작성하기 위해 약정국 사이에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가들 사이에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에너지 분야의 교류 강화가 기대된다. 또 IEA와 같은 국제기관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에너지 정책의 중요부문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정 공급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유국 · 소비국과의 관계

걸프 사태 이후 원유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유 매장량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선진국은 석유시장의 항구적인 안정을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에너지 수요의 신장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석유공급이 필요하다.

세계의 경제 · 사회개발은 석유가격의 변동이 주는 거시경제에 대한 충격에 의하여 요동되고 있다.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EC는 産 · 消間의 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EC 내부적으로 정치동맹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석유비축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사실 비축설비의 건설에 따라 얻어지는 利點이 몇가지 있다. 그중 하나는 단 · 중기적으로 석유수요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석유수요 급증의 방지로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월간석유, '92. 3〉

소비자는 알뜰하게
저축은 꾸준하게